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9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1 인쇄·출판 영업부 폐지론

1970년 9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당시 인쇄·출판업의 덤팡이 얼마나 난무했던 시기였는지 가능할 수 있는 사설이 게재됐다. 시보는 인쇄·출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차라리 영업부를 없애고 문의가 걸려오는 수주 건에 대해서만 작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일각의 의견을 사설 머릿글로 다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시보는 대형 인쇄사들과의 마케팅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수주하고 보자’라는 중소 영업 사원들이 덤팡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류는 마케팅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인쇄·출판 환경은 오히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인쇄물을 수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피해의 최종 당사자는 영업 사원이 아니라 각 사업주에게 돌아간다는 것. 시보는 ‘영업부 폐지론’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견이지만 탄업종에 비해 유독 덤팡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은 인쇄·출판인들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2 정부 인쇄공장설치

정부가 직접 인쇄 공장을 운영한다면 어떤 일이 벌 생할까. 1959년 9월23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당시 정부가 추진 중이던 정부인쇄공장을 반대하는 사

설을 비교적 의미 있게 게재했다. 이 사설은 당시 공보관실을 통해 찬성 의견을 내놓은 정부의 의견과 대한인쇄협회가 정부에 반론을 제시한 점을 분석해 보도하고 있다. 찬성안의 주된 골자는 정부 주도로 인쇄 공장이 운영되면 인쇄비 절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수요자들이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에 대해 인협은 ‘반대 이유 7가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맞섰다. 이에 대해 시보는 “정부가 인쇄 공장까지 운영한다면 소규모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도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민주 국가의 원리 ▲세수 감소 ▲도산, 부실 운영 ▲국영 기업체의 불허 정책 ▲장비 공급의 불균형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3 우수공산품 입상

동아지기인쇄소, 송전기계제작소, 반도잉크공업사 등 3개사가 1967년도 서울시 우수공산품 출품 기업으로 선정됐다. 9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기업체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품질 향상을 위해 시민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우수한 제품 출시를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이 업체들에 대해 크게 호평했다. 이 시상식에서는 총 71개 업체가 73개 품목들을 선보였다. 시보는 특히 이 3개사가 지류값 상승 등 원자재 난으로 재정이 힘든 상황이었음을 강조한 뒤 경비 절감과 기술 개발로

이를 극복해 왔다는 점을 자세하게 다뤘다. 또 인쇄·출판업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기술한 뒤 잉크 등 소모재의 활성화 하루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현실적인 극복 안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우수 공산품에 선정된 제품들은 시청 앞 광장에 1달 동안 게시됐다.

4 정부, 서독 인쇄기술자 초청

정부가 국내 인쇄 기술의 발전을 위해 벌고 나섰다. 1972년 9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수출 상품의 질적 향상을 끌어 올리고 변화하는 국제 시장 질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원천은 선진국과의 교류에서 나온다는 정부 시책을 1면 머리 기사로 다뤘다. 시보에 따르면 정부는 서독(현 독일)의 후원으로서 서독 기술자들을 국내에 초청해 인쇄 기술전반에 걸쳐 기술 지도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인쇄관련 업체 7곳을 미리 선정해 서독 관계자들로 하여금 미리 시찰할 수 있게 했다. 교육 과정은 사진제판공정 및 오프셋 인쇄기술에 등이 주 골자를 이뤘으며 원색 분해, 사진 식자 기술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했다. 6개월간 국내 각 공장에서 기술 지도가 이뤄졌다. 시보는 특히 기술 세미나 등을 통해 이론과 경험이 접목된 좋은 기회였다고 강조하고 국내 카메라 작업과 색 수정 부문에 대한 기술전수가 상당히 빠른 진척도를 보였다고 기술했다.



5_ 제책 부문의 최고봉

1974년 9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제책 기술에 대한 현장 경험담이 소개됐다.

시보는 제책에 대해 전형적인 다품종 산업이라고 소개한 뒤 잡지, 수첩 등 다양한 작업 영역에서 고정밀 기술이 집약된 인쇄 후가공 분야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한 업체와 인물 소개로 시보는 명진제책사(대표 이명홍)가 보유한 일괄 작업 공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당시 제책 업계에서 명진제책사는 대규모 업체로 알려져 있었으며 도서출판, 고급 양장 제본을 주 업종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기종으로는 정합·접지·재단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종업원은 100여명에 이르렀다.

시보는 특히 명진제책사의 표면적인 모습보다는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동 작업 공정이 다른 제책 업체와 비교했을 때 효율성면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또 사내 기숙사 설치 등 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인 이명홍 사장의 경영 노하우를 치하하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라고 기술했다.

6_ 휴대용 스텐슬 복합기

휴대가 가능한 수동 스텐슬 복사기가 영국의 한 업체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977년 9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에 소개된 이 복사기는 대형, 고급 전기 작동 기계 사용이 필요 없

다고 생각되는 서류 복사용으로 제작됐다. 시보는 이 제품에 대해 완전 자동 방식이며 스텐슬 전체에 잉크를 고르게 비를 수 있어 선명한 복사가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복사한 용지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이 가능해 잉크 및 종이 낭비가 극도로 줄었다는 점이다. 또 대형 고급 기계에만 있는 종이 조절 인쇄롤러가 탑재돼 있었다. 시보는 이로 인해 소형 복사기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조만간 큰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방했을 때의 제원은 880×475×310mm, 75×125mm의 작은 종이 크기까지 복사가 가능했다.

7_ 무독성 잉크개발

대한페인트·잉크(대표 한영신)사가 무독성의 '그린 잉크'를 개발했다. 1991년 9월13일자 인쇄신문은 대두유를 원료로 개발된 이 잉크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 환경까지 고려한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호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신문은 솔벤트 함유량(5%)이 현저히 낮아 기존에 출시된 제품(30%)들에 비해 무공해를 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문은 또 이로 인해 작업자의 건강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면 건조 속도가 빨라 작업 효율이 높아져 생산성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개발과 함께 본격적인 시판에 돌입한 이 잉

크는 광고 인쇄물에 사용하는 매업 잉크, 신문과 서적에 사용되는 윤전 잉크 등 두 가지 종류가 출시됐다. 출하 당시 물량은 40t 규모였으며 만양 공장에서 모든 작업 공정과 출고가 진행됐다.

8_ “국산 명실 밀착필름 우수”

‘국산 인쇄제판용 명실밀착필름도 외국 제품과 견주었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1994년 9월16일자 인쇄신문에 보도된 이 기사는 부산공대 인쇄공학과 손세모 교수가 공업 기술학원의 의뢰로 작성해 보고한 개발제품평가서에서 F사와 K사가 공급하고 있는 외산 명실 밀착필름과 비교, 분석한 결과 비슷한 성능이 검증됐다는 내용이다. 이 필름은 협진광학(대표 노훈)이 개발해 보급하고 있었으며 평가 부문은 비교감도 ▲형광 등 ▲안정성 ▲망점재현성 ▲현상액 적응성 등으로 나눠 실시됐다. 신문은 특히 적정 노광 테스트 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2~3%대의 노광율은 외산 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측정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명실밀착필름도 국산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손 교수의 말을 인용해 크게 호평했다. 당시 이 필름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부여되는 NT마크를 취득했다.

〈장홍일 기자〉